

‘피할 수 없는’ 대학구조개혁, 철학과 비전부터 공유하자

대학구조개혁

백승철 기자 scho1357@knu.ac.kr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을 처음 발표한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이후 두 차례의 공청회와 의견수렴을 통해 지난해 말, 평가지표 및 향후일정을 확정지었다. 이를 주시하던 대학의 움직임도 함께 바빠졌다.

대학구조개혁을 시행하게 된 목적은 크게 두 가지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대입정원 조정과 고등교육의 질적향상이다. 80년대부터 대학설립요건이 완화되면서 대학교육이 양적으로는 크게 늘었지만, 교육의 질은 담보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 교육부의 주장이다.

대학구조개혁을 통해 교육부는, 지나치게 비대해진 대학 정원을 적정 수준으로 줄이는 편편, 각 대학별로 특색 있고 강점 있는 학과 중심으로 조직 간소화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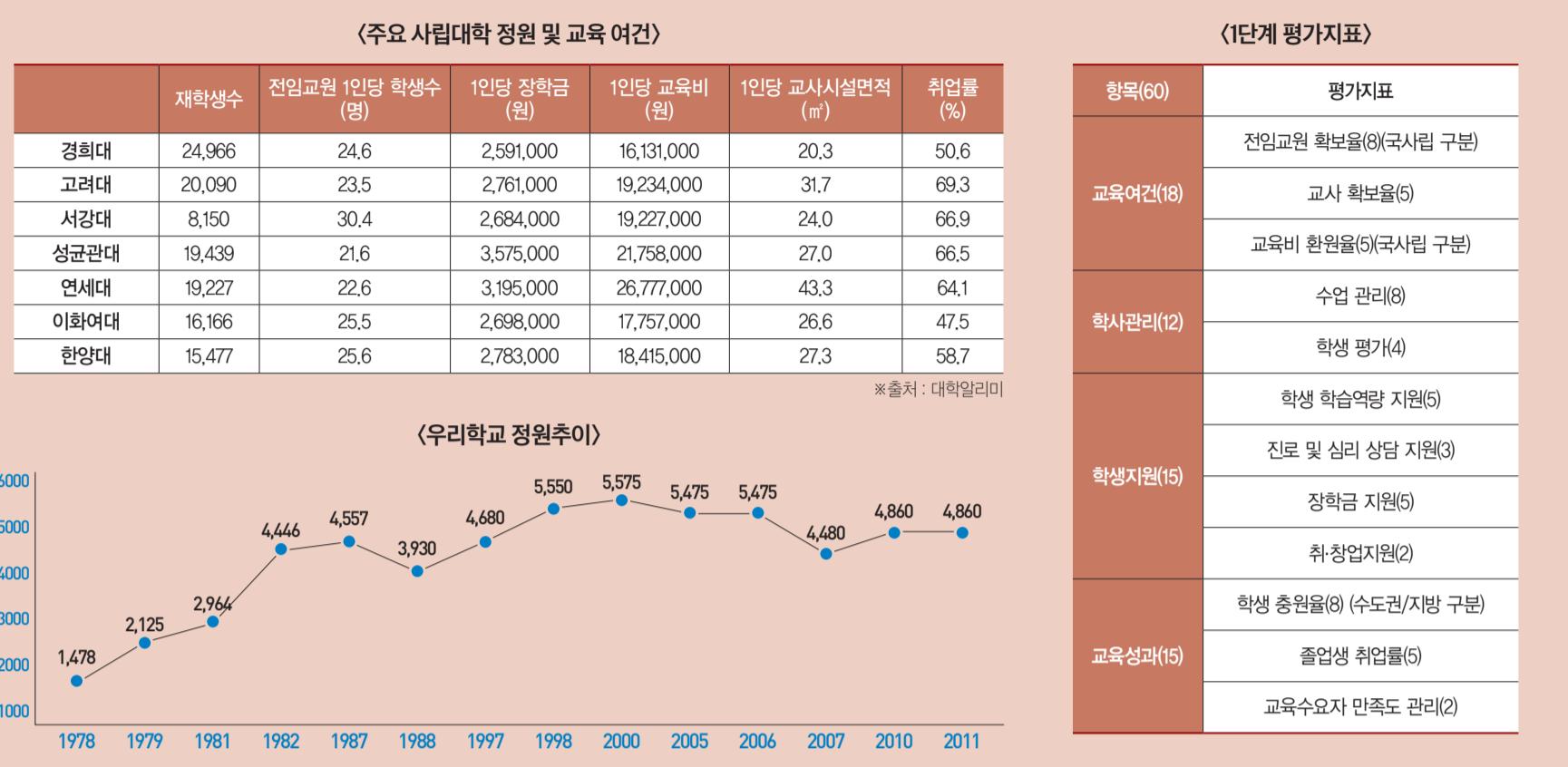
평가에 따라 A에서 E등급 부여

A등급 받은 대학은 ‘자율감축’

전체가 예체능 계열인 학교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대학은 교육부가 정한 평가지표에 따라 등급이 구분된다. 부여된 등급에 따라, 감축해야 될 정원의 비율 또한 달라진다. 가장 높은 등급인 A등급을 받은 학교는 정원을 자율감축 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된다. A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B,C,D,E 등급)을 받게 되는 학교는 교육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낮은 등급을 받을수록 감축해야 하는 정원의 비율이 늘어난다.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먼저 1단계와 2단계로 나뉜다. 1단계 평가에서 그룹 1과 그룹 2를 결정한다. 그룹 1에는 A부터 C등급 까지 받은 대학들이 속하고, 그룹 2는 D등급부터 E등급까지 받은 대학들이 포함된다. 이후 그룹 2에 포함된 대학만을 대상으로 2단계 평가가 진행된다.

1단계 평가는 크게 4개 항목 아래 12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된다. (표, 1단계 평가지표) 12개의 평가지표 중, 6개는 정량지표, 4개는 정성지표, 나머지 2개는 정량·정성지표로 이뤄진다. 교육여건 항목에는 전입교원 확보율, 교사 확보율, 교육비 환원



율로 구성되고 학사관리 항목에는 수업관리와 학생평가, 학생지원 항목에는 학생 학습역량 지원, 진로 및 심리 상담 지원, 장학금 지원, 취·창업 지원으로 구성되고 마지막 교육성과 항목에는 학생 충원률과 졸업생 취업률, 교육수요자 만족도 관리가 포함된다. 교육여건 항목에서 만점을 획득하고 나머지 지표에서는 만점의 80% 이상을 획득한 대학만이 A등급을 받을 수 있다. 자율감축을 하기 위해서는 A등급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보다시피, 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엄격하다. 미래정책원 학술진흥팀 우지연 팀장은 “A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여건 항목 뿐만 아니라 모든 지표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까다롭다”라며 “정량뿐만 아니라 정성지표 항목에서 높게 평가 받기 위해 학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대학교육연구소(대교연)가 지난 23일 사립대 143개교를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기준에 따라 시뮬레이션한 결과 자율적인 감축을 실시할 수 있는 ‘A등급’에 속하는 대학은 13곳에 불과했다. 이는 향후 우리학교가 A등급에 들 수 있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는 비율이다.

평가일정은 먼저 3월 말까지 1단계 자체 평가보고서(정성평가용)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정량평가용 자료는 4월 20일까지 제출한다. 또한 4월 중순부터는 교육부 평가 담당자가 각 대학을 현장 방문하면서 평가 한다. 1단계 평가 가집계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은 5월 하순부터 이뤄진다. 그룹 1과 그룹 2로 나누는 1단계 평가 결과는 6월 중순에 발표될 예정이다.

과도한 정원 문제점으로 자직받아와 적정 정원으로의 조정 필수

실제로 과도한 정원은 우리학교의 문제로 지적받아왔다. 우리학교는 서울지역 4년제 대학 중 가장 많은 재적인원이 있는데 2013학년도 기준으로 34,763명이다. 현재 우리학교의 교육여건 현황을 살펴보면 다른 대학에 뒤처지지 않는다. 2013학년도를 기준으로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정보를 보면 오히려 상위에 속하는 영역도 적지 않다. 교사면적(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의 합)의 경우 50만 6,000㎡으로 성균관대의 49만 여㎡보다 넓다. 전입교원 수 역시 1,481명으로 고려대 1,459명, 성균관대 1,388명, 한양대 1,033명 보다 많다.

문제는 이런 수치를 정원에 대입하면 그 결과가 거꾸로 나타난다는데 있다. 전체 재

학생 수에 비례한 단위면적 대비 대학이 보유한 교육공간 면적을 나타내는 지표인 교사(校舍) 확보율의 경우 교사면적이 우리 학교보다 30만㎡ 이상 적은 서강대보다도 약 11% 저조한 140.2%에 불과하다.〈대학주보 제1568호(2014.05.12.)〉

결국 적정 정원으로의 조정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정원조정에 대한 우리학교의 정책은 평가지표 올리기에 집중된 인상이다. 전체 교육의 질을 높이는 측면에서 적정 정원 찾기 등의 보다 근본적인 고민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대학특성화사업의 가산점을 위한 정원감축 건만 하더라도 감축이 예정된 4%의 정원감축 인원 중 차등감축하겠다고 한 1.6%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대학의 발전방향에 대한

비전과 철학 수립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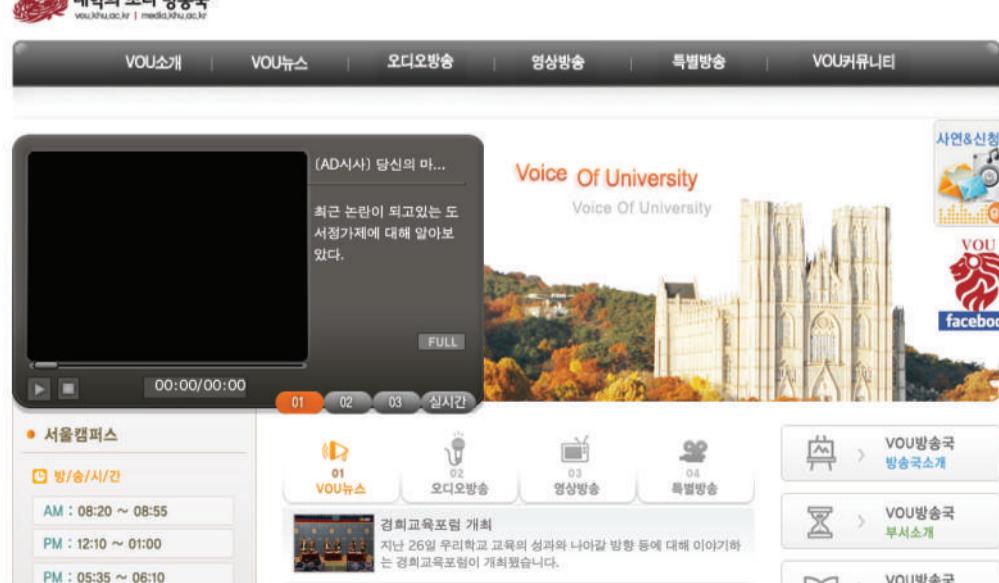
당장 두 달 앞으로 다가온 평가를 앞두고, 모든 대학들에 비상에 걸렸다. 우리학교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 지난 과거가 아니라 다가올 미래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타인이 정

한 기준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단순히 교육부에서 정한 평가지표만 높이기 위해 훑어 같아서 아니라 우리 대학이 처한 교육·연구·재정 현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정책결정 과정이 필요하다.

우 팀장은 “대학구조개혁을 밀어붙이는 교육부의 속내는 정원감축뿐만 아니라, 대학별로 강점과 특색 있는 학부와 학과 중심으로 거버넌스를 간소화하는 것이다”라며 “우리학교의 경우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장기적인 철학이나 비전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구성원들과의 소통이 전제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시간이 많지 않다. 국회에서는 이미 대학구조개혁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해 4월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아직 본 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된 상태이긴 하지만, 여야간 입장 차가 크지 않은 만큼 본격적인 평가가 시작되는 3월 전에는 국회에서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이 전까지 우리학교의 지향점과 그에 맞는 정원조정안을 구성원과 논의해야 한다.



저희 V.O.U는 Voice Of University, 대학의 소리 방송국이란 이름으로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를 기본 바탕으로 건전한 학풍조성운동에 앞장서서 경희가족 여러분에게 뉴스의 보도, 오락 및 교양프로그램의 방송을 하며 학내 정보 전달과 정서함양에 힘써 왔습니다.

저희 V.O.U는 항상 경희 구성원들과 대학의 지성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V.O.U 여기는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의 대학소리 방송입니다.**